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오주승



한나라당은 요즘 잘 나가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라는 '빅3'는 착실히 대선 행보를 하고 있다. 40%를 넘는 정당지지도는 한자리 숫자로 추락한 열린우리당의 4배 이상이다.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보궐선거에서 '40 대 0'이라는 압도적 승리를 여당에 완승했다.

여당의 쳐지는 '자리멸렬' 난파선의 형국이다. 변변한 대선 후보는커녕, 당의 진로를 놓고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괴롭히는 싸움질을 하고 있다. 정당으로서 존속 여부도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셈이다. 정말 한나라당은 10년간의 야당 생활을 청산하고 집권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낙관하기에는 너무 빠르다.

법안마다 발목, 식물국회 초래

국정은 일차적으로 정부·여당에 책임이 있다. 그렇다고 제일 야당인 한나라당

이 자유로울 수는 없다.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에 빠지고 여당이 핵 분열된 상황에서는 더욱 야당의 책임이 크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127명(전체 의석의 42.5%)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막강한 정치 집단이

한나라당, 오만하지 말라

다. 단순한 의석 숫자만으로 따질 수 없는 부분도 있다. 현재 정부·여당은 한나라당의 동의 없이 법안 하나, 인사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전효숙 사태가 이를 증명한다. 국회는 현재 소장 공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3개월 가까이 초래하면서도 결국 인준부 표조차 하지 못했다. 야당으로부터 '코드 인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이재정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아직 임명장을 받지 못

했다. 인사권은 대통령이 쥐고 있지만 최종 결재는 한나라당이 해주는 꼴이다.

법안 처리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사법법 개정 이후 한나라당은 사설상 국회의 입법 기능을 마비시켰다. 국회는 그 때부터 1년동안 법률상태다. 한나라당은 거의 모든 법안을 사법법 제개정과 연계, 법안 처리를 미뤘다. 지금 국회에는 사법개혁 관련 법, 국민연금법, 노인수발보법 개정안 등 법안 3천여개가 쌓여있다. 의원들조차 '제류법'을 수가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라며 허를 내두를 정도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뉴라이트의 역사교과서는 한국 근현대사를 새롭게 인식해 나가는 과정으로 학문의 진일보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극찬했다. 한나라당의 뿌리가 어디인지 알 수 있다.

'호남 구애' 진정성 없다

한나라당의 호남 구애는 눈물겹다. 당지도부가 동방 호남에 내려온 것이 올해만 4번째다. 지난 8월에는 강제석 대표가 호남 사람들에 대한 사과도 했다. 광주·전남지역 예산을 여당보다 더 쟁기겠다고도 했다. 그래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한나라당은 '광주 해방구' 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용갑 의원 징계를 놓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지 못한 채 강제석 대표가 '대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강 대표는 9일 광주에서도 봉사 활동을 한다. 당 대표의 대리 봉사로 해방구 밤언의 광장을 비켜가려는 생각은 너무 오만하거나 지나치게 순진한 것 아닌가.

한나라당은 지금 달콤한 '집권의 꿈'에 빠져 있다. 그러나 집권의 방식,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는 잊은 것 같다.

〈정치부장〉 jscho@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김병인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극원이 복잡한 한반도 정세가 더욱 긴장이 고조되어 재여울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거나 모순이 격화되면 동북아 각 당사국은 물론 전체 국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반도 북핵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각국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평화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6자회담을 통한 해결에는 의견의 차이가 없다. 이러한 전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협조하는 입장과 타협할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해결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6자회담이 진전을 보기 위해서는 먼

재 북한이 핵 폐기에 들어가면, 동시에 금융 재제 해제도 이루어져야 한다. 북·미, 북·일 간의 관계 정상화 회담도 북한의 핵 폐기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또 북한이 실질적 핵 폐기에 들어가면 경제 원조, 관계 정상화 회담 및 북한 체제 안전 보장은 전제되어야 한다. 네 번째 각국은 모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정책 수단과 정책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시 정

원칙을 지키며 풀어야

저 한국측 천영우 수석 대표의 말처럼 지나친 욕심을 부리거나 빠른 결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6자회담이 필요하다는 믿음을 갖고 충분하게 정보를 교환하여, 각국의 의도와 입장에 대하여 충실히 이해와 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이것이 회담을 진전시키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일이다. 만약에 필요한 준비가 부족하거나 타협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6자회담은 계속해서 형식적으로 흐를 것이다. 둘째, 각국은 어떠한 일방의 사태를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예를 들면 6자 회담 회복 후 잠시 교착 상태에 빠져,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하거나, 미국과 일본이 명확한 증거가 나오기 전에 무단으로 해상 봉쇄를 하는 행동 등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 세째,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은 변할 수 없는 것이다. 현

부가 핵 실험 이후 외교적 해결을 강조한 것은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미국은 동시에 평양의 현 체제가 변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 정부도 균형 잡힌 조정자 역할을 하려면 유엔이 금지하고 있는 핵이나 전략 물품 등을 제외하고 인도적인 지원 물품, 예를 들면, 식량, 의약품 등의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은 미래의 동북아 질

서를 근본적으로 뒤엎을 수 있는 무모하고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새로운 외교 노력이 활성화되어 사

람들로 하여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더욱 귀중하게 생각하게 하고, 나아가 실제적인 행동과 유효한 제도를 확보하여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와 발전을 가져온다면 전화위복(轉禍為福)이 되지 않겠는가? 〈서강정보대학교 교수 ·2006년 4월 수상자〉

은펜클립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 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립' 회원들의 기고를 싣는 코너입니다.

호텔 비치 물품 '슬쩍'... 양심을 버려서야

학교를 다니면서 시내 모 호텔에서 객실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호텔 객실에 비치된 스킨·밀크 로션이 수시로 사라진다. 값으로 따지면 1통에 2천~3천원에 불과한 스킨·밀크 로션은 투숙객들이 그대로 들고 나가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객실에 비치된 드라이기·수건 등도 종종 없어진다. 그래서 아예 드라이기는 쇠줄로 고정시켜 놓았고, 큰 객실의 컴퓨터 LCD모니터도 도난방지장치를 해놨

▲진보라·목포시 북만동

다. 얼마전에 LCD모니터 한대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투숙객들은 "내가 속박비를 냈으니까 이 건 가져가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듯하다.

공용 비치물품을 가져가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속박비 인상이라는 피해마저 안겨준다. 스스로 양심에 부끄러운 행동은 자체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문신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낯선 문화이다. 문신은 아무리 선한 사람의 선한 목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뭔가 불량기가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듯 사실이다. 타인에게 이런 첫인상을 심어준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마이너스 요인인 아닐까.

특히 조폭을 흉내내 섬뜩한 모양의 문신을 하다 보면 문신용액으로 인해 피부가 부풀어오르는 캘로이드 현상이 나타나거나 바늘에 의한 세균감염은 물론이고 종양 발생으로 몸이 상할 수도 있다.

▲류용규·광주 남구 서동

시설

광주시의회 유급 보좌관제 시기상조다

광주시의회가 내년부터 유급 보좌관

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광주시의회 예결위가 4일 내년부터 유급 보좌관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1억7천64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시선이 긍지 않은 상황에서 유급 보좌관제 도입이 과연 올당한지의문이다.

유급 보좌관제는 이미 지방의원의 유급화로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된 자체 재정에 악박요인이 될 것은 뻔하다. 이 때문에 유급 보좌관제를 도입한 곳은 서울시의회가 유일하다. 광주시보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높은 부산이나 대구 등 타 광역시의회는 재정 부담 때문에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반면,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57.5%로, 광역시 가운데 꽂혀 있다. 그렇다고 광주시의회의 직무와 선거구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타 지역의회보다 업무량이 많다거나 의정활동이 뛰어나다고 볼 수도 없다. 유급 보좌관제를 실시할 하등

의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시의회는 의원들의 정책 및 입법 활동 강화를 유급 보좌관제 도입의 명분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지방의회에는 전문위원을 두고 있다. 전문위원의 수적 제약으로 입법 지원에 한계가 있다면 그 수를 늘려 활용하면 된다.

광주시의 오락가락한 행동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시는 당초 예산 열악과 정원규정 충돌, 타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들어 의원 보좌관제를 강력히 반대했다가 태도를 돌변해 보좌관제 관련 예산 까워넣기로 동의하고 있다. 광주시는 행자부의 '부작정' 판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입장을 번복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최근 시의회의 과행과 소모적인 의정 활동이 정책보좌관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무성의하거나 전문성이 없기 때문인가.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기에 앞서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능력 등 자질부터 기워야 할 것이다.

바닥까지 추락한 사회지도층 신뢰도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5일 발표한 사회지도층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사회지도층에 대한 신뢰도가 15.8%로 지난해 17.1%에서 더 떨어졌다. 가히 밑바닥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어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안타깝다.

사회지도층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매우 싸늘하다. 사회지도층의 24.4%만 청렴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설문대상자의 83.1%는 사회지도층이 복지와 납세의무 등 국민의 기본적 의무조차 실천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 90.8%는 지도층의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이 '죄질에 비해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지도층을 부정과 부채, 특권층 등 부정적 시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지도층에 대한 신뢰도 추락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는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불감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대형 부정 및 비리사건 때마다 정치인

이나 공직자, 경제인 등이 빠짐없이 연루되었고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나듯 땅 투기와 논문조작 등 부도덕한 행위를 한 인사들도 있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냐는 한탄까지 나오겠는가.

사회지도층은 반성해야 한다. 지도층의 도덕불감증은 부정과 비리, 탈법과 불법을 부추기는 등 사회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지도층이 명예와 권위에 걸맞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사회지도층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지도층은 도덕불감증과 사회적 책임 불이행 등에 따른 국민들의 따끔한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이 구성원들의 신뢰를 잃은 사회에 무슨 희망과 미래가 있겠는가.

無等鼓

최근 디지털·인터넷의 등장으로 상식처럼 여겨왔던 20:80 법칙(파레토 법칙)에 반하는 논리가 고개를 내밀었다. 와이어드(Wired)의 편집장인 크리스 앤더슨은 "시장에서 히트하는 20%도 의미가 있으나, 다양한 수요를 창출하는 80%를 간과하고 있다. 인터넷 비즈니스는 성공한 기업 상당수가 80%의 꼬리(Tail)에 기반해 성공했다"고 주장한다. 이를바 풍태일 경제법칙을 주창하고 나선 것.

그러면서 그는 아마존의 주수익은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하기 힘들었던 80%의 책에서 매출의 57%가 나온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이 시대 대표적 인터넷 기업의 사례로 롱테일(The Long Tail)론을 펼쳤다. 이를바 풍태일 경제법칙을 주장하고 나선 것.

그러면서 그는 아마존의 주수익은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하기 힘들었던 80%의 책에서 매출의 57%가 나온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이 시대 대표적 인터넷 기업의 사례로 롱테일(The Long Tail)론을 펼쳤다. 시대의 새 경제법칙으로 규명하려 했다.

하지만 롱테일론은 비판론자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칼럼니스트인 리 고메스(Lee Gomes)는 앤더슨이 항상 롱테일의 예로 거론하는 아마존에서 꼬리가 머리를 앞서는 실제 데이터를 제시하라고 공개

질의했다. 앤더슨은 57%의 매출이 꼬리에서 발생한다고 했던 처음 주장과 달리 33% 정도의 매출이 꼬리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꼬리를 내렸다. 결국 앤더슨은 "구체적인 데이터가 좀 틀렸다고 해서 롱테일의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꼬리의 역할이 크고 앞으로 계속 증대된다는데 주목하라"며 한 발 물러섰다.

앤더슨 주장의 문제는 실증적 데이터로 입증된 파레토의 법칙에, 추측을 마치 사실인 양 호도하며 정면 도전한 점이다.

그런데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2007년 9대 트렌드' 보고서를 내면서 내년에 바로 이 롱테일 경제가 부각될 것으로 예측해 관심이다. 정보 교환이 가능한 웹 2.0 확산으로 개인화 부정 및 비리사건 때마다 정치인

이 종시되는 지도층이 구성원들의 신뢰를 잃은 사회에 무슨 희망과 미래가 있겠는가. 인터넷 시대, 틈새 상품이 주력 상품을 암도한다는 이 이론의 부상이 말로 흥미로운 예측이 아닐 수 없다.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중·고생 문신 확산 우려... 가정 지도 필요하다

부모는 물론 문신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낯선 문화이다. 문신은 아무리 선한 사람의 선한 목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뭔가 불량기가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듯 사실이다. 타인에게 이런 첫인상을 심어준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마이너스 요인인 아닐까.

특히 조폭을 흉내내 섬뜩한 모양의 문신을 하다 보면 문신용액으로 인해 피부가 부풀어오르는 캘로이드 현상이 나타나거나 바늘에 의한 세균감염은 물론이고 종양 발생으로 몸이 상할 수도 있다.

▲류용규·광주 남구 서동

光州日報

회장 許宰皓 副社長·편집·인쇄인 金禪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榮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